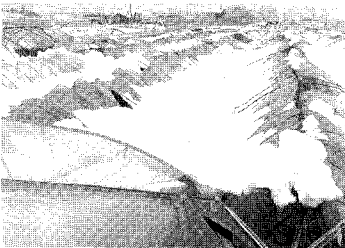




더 이상 하늘을 탐할 수 없는
 농업재해로 무너져가는 농경



『
 때아닌 게릴라성 폭설로 인해 지금
 농촌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
 6,106억원(정부집계) 가운데
 농림분야만 5,954억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니, 농민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할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조류독감의 악몽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날씨까지 우리
 농민들의 힘겨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집중적인 피해를 본
 충남·북, 대전, 경북지역의 경우
 딸기농가의 2억이 넘는
 딸기하우스가 완전히 박살났는가
 하면, 축사붕괴로 젖소와
 돼지·닭들이 폐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2004.3.17 07시 현재 피해현황 집계

구분	내용
농작물피해	딸기·수박 등 1,673ha
가축피해	닭·소·돼지 등 1,391천마리
농업시설물피해	비닐하우스 2,538ha, 인삼·버섯시설 4,325개소, 축사 6,945동

□ **폭설피해 전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농업은 농민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해방 직후 미국의 밀가루 원조에 우리의 밥줄을 맡긴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으며,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식량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달아 왔다. 그런데도 국정운영을 하는 정부당국의 농업정책에는 이러한 서러움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못해 더욱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폭설피해대책만 보더라도 정부의 농업정책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주먹구구식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0일 폭설피해 전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말이 특별재해지역이지 실상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이재민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켜주기 위해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수해대상농가를 2ha 미만의 경작자들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의 규모화정책을 착실히 실천해 왔던 농가들은 위로금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종 복구비지원을 국비·지방비·용자·자부담으로 분류하여 비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수해대상을 2ha나 3ha미만의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정부에서 권장하는 규모화시설을 갖추어

놓은 농가는 수해대상에서 제외 된다.

피해농가의 자부담경감을 위해 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50%가 넘는 용자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수해대상자들마저 복구비의 50%이상을 용자금으로 복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결국 한번 재해를 입은 농가는 당장 급한 자금만 용자를 통해 변통한다 뿐이지 결국은 모두 갚아 나가야 할 농가부채인 것이다. 농사기간 중 연간 평균 2회 이상의 자연재해를 매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변통해다 쓴 피해복구 용자금으로 인해 농민들은 원상복구는커녕 말버둥 칠수록 더욱 더 헤어날 수 없는 농가부채의 늪으로 빠지고 만다. 이제 대부분의 농가들은 농가부채로 인해 용자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가 2차손해로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범위**

내용	비용
80%이상 피해농·어가 이재민(2ha미만 경작자에 한함)	500만원
50%~80%미만 피해농·어가 이재민(2ha미만 경작자에 한함)	300만원

항 목	보 조		자 부 담	
	현 행	특별재해	현 행	특별재해
○ 농경지복구(3ha미만)	60	70	10	-
○ 농림시설(2ha미만)	35	45	10	-
○ 농림시설철거비(2ha미만)	35	45	10	-
○ 농작물 대파대	70	85	30	15
○ 축사(잠실)-소규모	35	45	10	-
○ 가축·누에입식	50	60	20	10
○ 작목 및 표고버섯 재배시설	35	45	10	-

피해 집계는 3월 12일에 끝난다는 것이다. 가축들은 폭설의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리활동을 못하거나 점차적으로 병에 걸려 죽는 경우가 많고, 농작물은 완전히 망가져 소득은 고사하고 그동안의 투자비조차 모조리 빚으로 되돌아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보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행 농업재해대책 하에서는, 갈수록 농민들의 어려움은 극단으



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우리농업의 위기와 더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에도 엄청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사정이 이러한데 평상시 농업재해대책이 야 말할 것도 없다.

□ 올해도 땀질식 처방으로 일관

“농업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사지를 수 있는 근본적 농업재해대책이 없는 한, 아무리 좋은 농가부채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한농연은 정부에 근본적인 농업재해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에 이어 현실적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농림부, 행정자치부, 주요정당에 발송하였으며,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전화하면서 일선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소비자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가축입식비 및 철재비닐하우스, 자동화하우스 등의

자재복구 지원단가를 각각 13.2%포인트, 6.4%포인트 인상하였으며, 축사·계사복구지원 대상면적을 현행 1,800㎡에서 2,70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농신보 보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신결격사유 농민들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여부를 심사하여, 회생이 가능할 때는 부채대책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을 각각 1억원씩 특별보증토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일은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매년 이런 식으로 재해대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급기야 농가부채에 대한 부담과 영농의욕 상실로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 행동을 보일 때만이 대책을 세운다면, 신뢰농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현 시점에서 정부와 농민들 간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농업재해에 대한 올바른 원칙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땀질식 처

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얼마 전에 농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대규모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총체적 위기를 우려하며 정부에서는 119조 투·융자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지역개념으로 할당된 지원액은 지역별로 약 500~600억원이 산정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총 5,000~6,000억원이 지원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이번 폭설로 인한 4개 지역의 농업부문 재산피해액이 6,000억원에 가깝게 발생한 현실을 고려 할 때, 우리 농민들은 매년 최소한 2회 이상을 FTA와 맞먹는 정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이 생계구조수준·땀칠처방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의 식량주권수호의 책임을 재정적 이유를 핑계로 순전히 농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목선택에서부터 수확까지 운이 좋으면 소득이 나고 운이 나쁘면 부채를 떠안는 우리농업 현실이 도박과 다를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 농업재해대책의 근본적 개선 시급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농업재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이번 폭설피해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농업시설복구비에 대한 국고보조를 50%이상, 지방비를 20%이상 확대하여, 융자지원이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귀속되는 악순환을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긴급투여된 65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융자 1년간 금리 3%)은 상환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고 완전 무이자로 지원되어야 한다.

농업재해로 인한 농신보 무입보 3억원 보증 한도도 폐지하여 농업재해로 인한 회생자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가부채로 인해 연체자·신용불량자에 포함되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농신보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연체자나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조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십년간 생계구조적 수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업재해지원규정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 농업재해로 인한 소득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지원조항을 마련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

모쪼록, 이번 폭설피해를 거울삼아 정부·국회·학계·정치권에서 근본적인 농업재해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더 이상 농업재해가 농가부채·영농활동 포기로 이어지는 불행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농연**

